

2022년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춘계학술회의_ ‘한반도의 정치 공간과 시대변화를 읽는 사유의 힘’

저서와 번역서 중심에 둔 독특한 발표…“지성의 나침반 역할 하겠다”

저작과 번역 통해 ‘말하고 묻는’ 방식의 색다른 접근

시대상황은 근대문명과 한반도 특성 관련 위기 가능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정세가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역학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학회장 강상규 방송대 교수·일본학과)가 ‘한반도의 정치 공간과 시대변화를 읽는 사유의 힘’을 주제로 2022년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방송대 대학본부 열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학술회의는 제1부 ‘역사 속 한반도의 정치 공간의 다이내믹: 저작을 통해 말하다’, 제2부 ‘전환기의 정치와 사회를 읽는 사상가의 눈: 번역을 통해 묻다’로 진행됐다. 학회 발표가 개별 연구자들의 논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인데, 이번 학술회의는 ‘저작’과 ‘번역’을 통해, 말하고 묻는 방식이라는 조금 색다른 접근을 선보여 흥미로웠다.

학회 지향점 확인해준 발표들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회장에 연임된 강상규 교수는 학회장 인사말을 통해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가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는 ‘동서양 사이의 긴장, 남북 간의 파고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우리 민족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지적인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논문은 제1부 「소중화 조선, 대마도를 정벌하다」(박홍규·고려대), 「태종의 공신·외척세력 제거의 정치적 의미」(박현모·여주대), 제2부 「만들어진 종교: 메이지 일본을 관통하는 종교라는 물음」(이예안·한림대), 「코로나19 시대의 사회 감정: 마사 누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을 중심으로」(조계원·고려대)다. 철저하게 저작과 번역서를 중심으로 ‘말하고’, ‘묻는’ 학술대회였다. 발표 후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의 사회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어떻게 바꿔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자와 토론자 등의 종합토론이 예정됐지만, 발표가 길어지는 바람에 아쉽게도 폐회사에서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번역서를 놓고 논의를 펼친 2부보다 저작을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친 1부를 중심으로 이날 춘계학술회의의 지적 풍경을 복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소중화 질서’ 확인과 ‘토사구팽’의 재해석

제1부 논의는 각각 『태종처럼 승부하라』(푸른역사, 2021), 『태종 평전』(흐름출판, 2022)을 바탕으로 전개됐는데,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



지난달 25일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학술회가 열렸다.

사진=최익현

듯 ‘태종’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는 소재적 측면일 뿐,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를 천착했다.

박홍규는 1419년(세종 1년) 5월 왜구의 침입에 대한 상왕(태종)의 대응 즉, 이 과정에서 상왕이 어떻게 상황을 활용해 ‘소중화 질서’를 구축하게 되는지를 추적했다. 박현모는 왕자의 난을 통해 집권한 태종 이방원이 외적인 여흥 민씨 세력과 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재조명함으로써, 율나라 재상 범려(范籲)의 말에서 유래한 ‘토사구팽(兔死狗烹)’이 정치세계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상기했다. 전자는 15세기 초 정치질서로서의 ‘소중화’라는 의식과 이의 현실적 발현이란 문제를 제기했다면, 후자는 ‘토사구팽’이 오늘날 정치 현장에서도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결단임을 환기했다.

신하들의 대마도 정벌 반대론을 물리치고 자신의 뜻을 관철했던 상왕(태종)의 정치 행위에서 박홍규가 읽어내려 했던 것은, 대마도 정벌의 진짜 목적이었다. 여기서 발표자는 기존의 ‘명의 정왜론(征倭論)’이 아닌 ‘조선의 국가전략과 그에 따라 실행된 대 일본 정책’이라는 맥락을 좀더 강조했다. 그 결과,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에 따라 대 일본 기미정책을 추진하던 상왕이 왜구의 침략을 받게 되자,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를 급격해 왜구를 응징하고, 대마도주의 항복을 받아내서 손상된 대 일본 기미정책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읽어냈다.

박현모의 발표문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은 다음이다. “문제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이 정치사에서 발견되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점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사냥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활과 사냥개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나, 국가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고, 선거가 끝났는데도 가(家)의 이익이나 당파적 목적에 매

몰돼 있는 사람들이 그 예다.” 여기에 ‘위국(爲國)’ 즉, 국가를 만든다는 것의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공신이었던 하륜과 조영무가 온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야말로 ‘위국’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지기[烹] 싫어 스스로 물러나 숨으려[藏] 애썼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박홍규의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송중호(방송대)는 기존 논의에서 탈피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요약하자면 첫째, ‘중화공동체’와 ‘소중화 조선’이라는 세계 속에 일본 막부의 위치는 어땠을까. 둘째, ‘태종=정치적 리얼리스트’라고 설명했지만, ‘소중화 조선’이란 유교적 명분론에 입각한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대마도 정벌에 나선 태종의 정치 행위는 ‘정치적 리얼리스트’로서의 외교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셋째, 태종과 세종의 대 일본 정책 상의 차이와 그것이 조선-일본 관계에 미쳤던 영향을 오늘날 한일관계에서는 어떻게 참고할 수 있을까. 일본 막부의 위치에 대한 좀더 치밀한 논의와, 리얼리스트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유교적 명분론’에 치우친 것은 아니냐는 반론이다.

토사구팽의 의미를 강조한 박현모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 소진형(서울대)은 “왕권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외척과 공신을 제거하는 것은 역으로 왕권을 더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태종이 외척과 공신을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운을 떼면서 “태종과 민씨 집안 사이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태종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인가? 민씨 집안의 변명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태종이 민씨들의 불충과 욕망을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태종대의 공신들이 여전히 등용되거나 제거되는 것을 유형별로 나누는 것이 과연 ‘공신’에 대한 문제일지, 아니면 일반적인 ‘신하’에 대한 것일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지금, 여기’와는 다른 시공간을 탐색하는 의미

강상규 학회장은 폐회사에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시대 상황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근대문명의 복합적인 위기의 측면과 함께,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관련된 위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반추해가면서 답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문명 전체를 종합적으로 직시하면서 지혜로운 해법을 마련해가야 한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반도의 정치공간과 시대변화를 읽는 사유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오늘의 발표와 토론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법을 ‘지금, 여기’와는 다른 시공간을 넘나들며 탐색해보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뤄졌다”라고 의미를 매겼다.

최익현 편집기획위원 editor@kyosu.net

‘너무 많은 민주주의’ 벗어나기…권력 분립·파당 대립도 견제

네이버 열린연단 ‘자유와 이성’ ⑫ 박찬표 목포대 교수

네이버 ‘열린연단’이 시즌9를 맞이해 ‘자유와 이성’을 주제로 총 44회 강연을 시작했다. ‘자유’를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의 본성, 재난과 질병에 대한 제약과 해방 등을 역사, 정치, 철학, 과학기술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살펴본다. 지난 달 25일 박찬표 목포대 교수(정치언론홍보학과)가 「자유, 공화주의, 다원주의」를 강연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발췌해 소개한다.

제13강은 박수형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관의 「자유주의의 변용: 역사와 사회학적 맥락」, 제14강은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경제사상)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제15강은 손화철 한동대 교수(기술철학)의 「기술 발달과 인간의 자유」, 제16강은 도승연 광운대 교수(정치/사회철학)의 「자유와 근대 감시 체제」가 예정돼 있다.

자료제공=네이버문화재단

정리 김재호 기자 kimyit@kyosu.net

이 글에서 필자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다원주의를 각각 개별적 주제로 다루기보다는, 민주주의와 함께 현대 ‘민주정’을 구성하는 일련의 원리와 교리들의 묶음으로 다루고자 한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긴 해도 너무 많은 민주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적 가치들은 중요하지만 더 많은 가치를 중 일부일 뿐이고, 다른 좋은 것을 위해서 민주적 의사 결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민주적 가치들을 희생시키고자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결합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제약을 부과하는, 그럼으로써 ‘너무 많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다.

먼저 공화주의에 의하면, 완전한 인간 존재의 발전은 공적 영역에서 달성될 수 있다. 사적 혹은 파당적 이익이 공공선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공선에 자신을 헌신할 것이 요구된다. 이것이 시민이 추구해야 할 덕성이다. 공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위험이 될 수 있다. 덕성을 가진 자들이 왜 사적 일에 빠져 있는 자들을 대표하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그 결과 공화주의는 자칫 엘리트주의 혹은



박찬표 목포대 교수(정치언론홍보학과)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유주의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문화재단

“매디슨은 인민의 직접 참여에 수반되는 근본적 문제점(파당 문제)을 지적하면서, 대의 민주정이 직접 민주정의 열등한 대체물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역설한다.”

과두제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세 흐름 중에서 유일하게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공화주의처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을 설정하지만, 공화주의와 달리 인간 존재의 잠재력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사적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결과하는 사적 자유(시민적 자유)는 일종의 계약이나 동의 혹은 자연법의 결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국가를 포함해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어떤 권리들이 있다는 생각을 핵심으로 한다.

자유주의가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에 위치한 개인에게 방어적 권리를 부여한다면, 공화주의는 공적 영역에 위치한 개인들에게 의무를 부여한다. 민주주의는 데모스에게 결정에 적극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권력 분립 이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권력 분립은 흔히 권력의 수평적 책임임을 실현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선거라는 수직적 책임성의 메커니즘과 짝을 이루는, 혹은 후자를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으로 간주된다. 연방 헌법 제정 당시 권력 분립 이론은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 모두 공화정체의 공리로서 수용하는 원리였다. 비준 논쟁에서 반연방파들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나 상원의 인준권 등을 근거로 신헌법이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엄격한 권력 분립에 기초한 헌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1751~1836)은 권력 분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3부 간에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상적으로 보면, 이러한 대립은 ‘권력 분립’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만, 단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둘러싼 대립으로 보이기도 한다.

매디슨이 강조하는 ‘견제’의 대상은 무엇인가? 매디슨은 대의 민주주의의 경우, 집행관의 권력은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고, 사법권력은 더욱 명확하게 한계가 그어져 있는데, 입법부의 권한은 보다 광범위하고 또 엄밀히 한계 짓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입법부는 은밀하게 다른 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입법부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면서 모든 권력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입법부의 모험적 야심이야말로 인민이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된다. 매디슨이 주장하는 견제와 균형의 체제는, 순수한 권력 분립과 달리, 각 부에 대해 다른 부의 권한 침해

에 맞설 수 있는 견제의 수단을 부여하는 체제이다.

또한 매디슨은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점으로 ‘파당 대립’을 지목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 이익, 자기애, 혹은 정념에서 벗어나 수 없는 존재이며, 이러한 한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서 더욱 심화된다고 경고한다. 파당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기에 근절될 수 없으며 단지 영향을 제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한다. 결국 이는 어떤 집단도 파당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논리이다. 그것이 다수파일 경우 스스로가 파당적임을 자각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매디슨은 다수 지배가 파당적 다수 지배로 되지 않으려면, 공공선과 개인과 소수 권리의 보호라는 또 다른 원리와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다수결 원리는 집합적 의사 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지만(민주주의), 그것은 개인 및 소수 권리 보호와 양립 가능하도록 제한되어야 하며(자유주의), 또한 다수가 주권적 권력이 되었을 때 그 권력은 당파성을 벗어나 공공선을 추구하는, 공공성의 구현체가 되어야 한다(공화주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공화주의 간의 균형을 지향한 매디슨의 목표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매디슨은 인민의 직접 참여에 수반되는 근본적 문제점(파당 문제)을 지적하면서, 대의 민주정이 직접 민주정의 열등한 대체물이 아니라 보다 우월한 체제임을 역설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간접성이 가져다주는 “정제와 확대”를 대의제의 장점이자 대의제가 추구할 기능적 목표로 제시한다.

매디슨의 정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초로서 ‘다원적 사회’의 중요성을 제시한 부분일 것이다. 매디슨은 민주주의에서 파당적 대립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연유함에 주목하고서, 파당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공역의 다원적 사회)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대의 기구의 조정 능력 이전에 시민사회의 균형 구조가 파당적 대립의 완화 즉, 체제의 사회 통합 능력을 좌우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